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62.10 (-20.42)	845.84 (+1.12)
금리 (연평균)	환율 (원/달러)
3.390 (-0.044)	1376.00 (-0.10)

# metro® 경제

“다시 기업가정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04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6월 5일 수요일

## 2024 KOREA-AFRICA SUMMIT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마친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세이크 엘 가즈아니(앞줄 왼쪽 세번째)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ODA 100억불 수준 확대… 수출금융도 140억불 제공”

(공적개발원조)

### 韓-아프리카 정상회의

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복합위기 국제적 협력·연대로만 극복 가능 양국 상생 파트너십 필요성 강조 원활한 교류 위해 제도기반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불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식”에서 개최사를 통해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세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본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면서 한-아프리카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제시하고,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에 대해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며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속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해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성”과 관련,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식량안보와 보건 지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기술 전수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K-라이프 서비스 사업 확장으로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에볼라와 코로나 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세션에서는 참가국 정상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대 주제와 3대 방향이 ‘아프리카 2063 아젠다(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평화와 안전, 인간 중심 발전)’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尹, 재가… 사실상 폐기 수순 MDL 일대 사격훈련 등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됐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당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했다. 군사분계선 5km 내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하지 않으며,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의 재가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훈련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가능하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 종부세·임대차2법·전세사기특별법… 여의도에 쏠린 눈

국회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주목 여야 종부세 개편·폐지 논의 급물살 전세사기특별법·임대차2법도 이견

정부가 추진 중인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모두 법 개정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임대차2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역시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종부세 추가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 종부세, 다주택자 완화 vs 1주택자

배제 이번 종부세 개편은 야당이 먼저 불을 당겼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SNS를 통해 종부세제를 종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한 개편을 꺼내들었다.

개편 방향에는 여야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정부가 내세웠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완화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제 개편 당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없애졌고, 3주택자부터는 여전히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거론 중이다.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기본공제선을 높이는 방안이다

◆ 임대차 2법·전세사기특별법 ‘여야 이목’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년간의 결한 피해자는 1만7593명에 달한다. 정부는 2년 한시로 제정된 특별법이 일몰하는 내년 중반에는 피해자가 3만6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구제는 더디게 진행 중이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했던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하루 만에 폐기됐다. 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22대국회에서도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내길 힘들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여당 토론회서 “야 민생지원금 심각한 위한 논란 야기” /사진 뉴시스  
▲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 “방송3법 재추진”

▲ 국힘 미디어특위, 야 방송3법 재추진에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 저지”  
▲ 김기현 “이재명 대선 레드카펫 가느라 당내 민주주의 던져”



▲ 홍준표 “문재인, 판문점회담때 김정은 건넨 USB 밝혀져야” /사진 뉴시스  
▲ 자유총연맹, 북 오물풍선·GPS 교란 규탄… “안보·생명 위협 안 돼”